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조속히 추진해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보훈대상자 건강권 보장 위해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북에는 약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훈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

까지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도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법적 비급여·약제비 지원 제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지원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한목소리로 보훈병원 설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송천동 울기즈365소아청소년과의원...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울기즈365소아청소년과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에도 병원 야간 시간대와 휴일(토·일·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동네의료기관을 통한 경증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정병원 확충은 기존 덕진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기관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백으로 지난달 지정이 취소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진료 공백 최소화 및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덕진구 소재 소아의료기관을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인 울기즈365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며,

토·일·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주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전주다솜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울기즈365소아청소년과의원 등 3곳으로, 시는 이번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아동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으며, 이후 지역 내 소아의료기관의 지속 참여 유도와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해 현재 3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들 참여 의료기관은 올해 기준 3만 7000건의 진료실적을 기록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으로 아이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친화적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올 한해 지역경제 전반 체질 강화

탄소·수소·드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미래 신산업 기반 확장·민생경제 안정 주력

전주시는 2025년 한해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수소·탄소·드론 중심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도시·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전주시립상품권과 소비쿠폰, 전주형 상생 프로젝트 전주함께잡터 운영 등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공동체 기반 회복에 주력했다.

시는 올해 예비수소기업 6개사를 발굴하고, 3개 수소기업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시켰으며, 전미·상립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도심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충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수소경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달 준공된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를 본격 운영해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67건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지원했다.

대형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센터 준공과 8종의 핵심 시험장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탄소분야에서 2건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탄소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를 통해 56개 기업에 676건(8,633시간)의 정비 시험 및 시제품 평가를 지원하

고, 교육·벤처마킹 프로그램도 17회 운영했다.

특히 총 146억 원이 투입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헤터 준공돼, 33개국 290개 팀, 1,600여 명이 참가한 세계 최초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했다.

시는 올해 미래 신산업 기반 조성도 본격화했다. 일례로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324억 원 규모의 14개 핵심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AI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AI 산업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지컬 AI 선도모델 및 개념 실증(POC)·AI 신뢰성 실증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장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혁신의료기기 인재 300여 명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실증 기반을 확대해 5개 기업을 신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시는 비상시국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184억 원을 지원해 약 80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2개 분야 14개 사업을 통해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권희성 기자

베트남 유통망 입점 등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창출하며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4억을 확보해 경관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 여건을 마련했으며, 탄소소재 산업단지 분양에 발맞춰 유망기업 유치를 활발히 하는 등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시는 △전주사랑상품권 2000억 원 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주 희망드림터 특례 보증 및 안심 연장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고, △골목형상점가 47개소 지정 △골목상권 드림축제 4개소 개최 △골목콜상권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원도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나아가 시는 올해 전주형 상생경제 프로그램인 ‘전주함께잡터’를 추진했다. 그 결과 26개 기업과 11개 단체, 2개 기관이 참여해 36회에 걸쳐 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기부와 현물지원이 이뤄졌으며, 총 65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1년 동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사회경제적 생태계를 넓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전주시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분실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7㎡ 이상 거주하는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서는 벌금·과태료 등의 고지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336곳을 올해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바탕으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주민들의 정확한 수령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대상’

전주시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1월 말 기준으로 총 6210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으며, 특히 시세의 경우 전년보다 21억 원을 더 징수했다. 그 결과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징수실적을 인정받게 됐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 확충을 핵심 목표로 삼고 다각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시는 ‘정기분 지방세 납내 징수율 1%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는 납기내 징수를 제고를 위해 전세목 대장 정비와 정기분 부과 과세자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세입 관리에 적극 나섰다.

동시에 버스정보시스템·교통전광판·SNS·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세무 직원이 참여하는 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또,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목표액 19억 원 중 17억 원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숨은 세입발굴 조사단’을 구성해 부동산 취득세 탈루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용도변경,

과점주주 등 탈루 취약 분야를 집중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시청과 구청의 37만 5개입 31명이 상·하반기 직무 연천을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입 누락 방지와 세입 기반 확충에 힘쓴 결과 20억 6000만 원을 추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 시는 상·하반기 및 회계 마무리로 연중 세 차례에 걸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고지서·압류예고서 등 45만여 건을 발송해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를 강화했다.

이는 목표액 177억 원 대비 192억 원(108.5%)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가상자산(168명) 압류 △반호관 영치(915대) △명단 공개(162명) △출국 금지(191명) 등 강도 높은 체납자 압박 수단을 병행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공매 추진을 통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시는 수표 추적, 태양광 전력 대금, 대여금고 압류 등 신종 징수 기법을 적극 도입해 총 55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채권추심전문가를 통한 현상 중심의 징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회계 마무리 특별징수기간을 활용해 나머지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